

전남도, 106억원 투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만든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고용 프로젝트, 농촌 일자리아사업·인력 양성 1435명 고용 창출·2만3405건 일자리 지원...사업별 세부 사항 조율

전남도가 삼시 부족한 조선업 인력과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67억원을 포함해 106억원을 투입해 조선업·농촌 등에 1435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취업연계, 기업 지원,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 사업이다. 전남도는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해제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인력수급 문제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조선업 고용도약 프로젝트',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인력 양성사업'에 총 106억원을 투입해 고용 창출과 함께 2만3405건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

이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원청사·협력사 간 임금, 근무 여건 격차 등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자체, 원청사, 근로자, 4자가 2년간 200만원을 적립해 만기에 협력사 근로자에게 8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400명 지원을 목표로 올해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 숙련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 고용도약 프로젝트'는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업 희망공제(신규취업자 대상)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사업

을 지원한다. '지역상생 농촌일자리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서부권에서는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동부권에서는 보성읍 중심으로 농번기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도시 구직인력과 구인 농가 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또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및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업별로 지원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과 산업에 맞는 지역 주도의 산업별 일자리 지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사업을 수행 기관과 함께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중한 한표' 재외국민 투표 시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버스를 타고 온 텐진 교민들이 신분확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11억·김영록 전남지사 24억 공직자 재산신고...황경아 남구의원 252억 가장 많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억 3500만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1억 3500여만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강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400여만원 늘었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8000여만원), 오영훈 제주지사(8억3500여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5개 구정장 가운데는 문인 북구청장이 20억 3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병규 광산구청장 10억여원, 김병내 남구청장 7억 2200여만원, 김이강 서구청장 4억4000여만원, 임택 동구청장 3억2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의회 의원 가운데는 심창욱 의원이 작년보다 83억3600여만원 늘어난 149억2400여만원

을 신고했다. 부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가 77억 9600여만원이나 증가했다. 기초의원 중에는 남구의원 황경아 의원이 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7억7000만원을, 박창현 정무부지사는 13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56억4000만원을 신고했으며, 이동현 전남도의회는 89억원을 신고해 도의원 중 최고의 재력가로 꼽혔다. 또 기초의원 중에는 신안군의회 박용찬 의원이 60억 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충남의 단국대대 부속병원을 '광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광주기독병원 등 13곳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필수요를 책임지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관할 단위에 따라 '광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광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의 단국대대 부속병원이다. 광역 책임의료기관은 사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요를 제공하

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광주의 광주기독병원, 인천의 인천세종병원과 나은병원, 울산의 동강병원과 울산병원, 경주의 동국대 경주병원, 경기 안양의 한림대성심병원, 경기 부천의 부천세종병원, 충북 제천의 명지병원, 충남 논산의 백제병원, 전북 전주의 예수병원,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 전북 정읍의 정읍안산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병상이용 생활권인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요를 제공하면서 지역 보건요기관 등과 협력한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시, 숙박·식품점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광주시는 "숙박업, 식품점객업소는 29일부터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되며, 식품점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차약·삼푸·리ンス를 무상제공할 수 없으며,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

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삼푸·리ンス 등이 담긴 디퓨저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점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서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점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에 '긴급복지'

전남도, 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 어려운 가구 신속 발굴 지원

전남도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어려운 도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광군에서 사업 실패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홀로 텐트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

려운 도민을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발견,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4792명에게 188억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83만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29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4인 기준 1172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긴급복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군 공고 제2024-498호

학산면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관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학산면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관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4 일
영 암 군

1. 계획의 내용

- 계획 명: 학산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위한 영암 관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위 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81-1 일원
- 면 적: 10,802㎡(유원지)
- 사업시행자: 토담골 대표 박경섭
- 승인 기관: 전라남도

2. 공람내용

가. 영암 군기본계획(부문별계획-공원 및 녹지계획·유원지) 결정(변경)안 나. 영암 관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목적: 2024년 영암 군기본계획(일부변경)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나. 개최일시 및 장소: 2024. 04. 01.(월) 15:00. 광암마을회관 다. 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신설	토담골유원지	학산면 학계리 81-1번지 일원	-	총) 10,802	10,802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4. 3. 14 ~ 4. 11. [2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장 소: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 사무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go.kr/)

5. 관련도서 및 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공람 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행정절차 변화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도시정관팀(☎061-470-2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